아세안 경제통합의 진행상황 평가와 한국의 대응 방향:

TBT와 SPS를 중심으로

곽성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장

sikwak@kiep.go.kr

신민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mgshin@kiep.go.kr

김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2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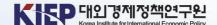
동남아대양주팀 전문연구원 jegook@kiep.go.kr

장용준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교수

yjjang@khu.ac.kr

최보영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bychoi2@knu.ac.kr



차 례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 조사 및 분석 결과
-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됨.
 - 아세안은 팬데믹 이전 자국 중심의 투자 유치 전략을 취하면서 경제통합에서 멀어지는 인상을 주었지만, 팬데믹 이후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 회원국간 방문객 수는 2021년과 2022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 TBT(Technical Barrier to Trade)와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규 제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국-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먼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TBT의 경우,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의 규제거리는 짧게 나타났지만, 아세 안의 보호 성향이 강한 SPS는 한-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남.
 - 최근까지 아세안의 관세율은 감소했지만, TBT/SPS 조치와 무역현안은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
 - 아세안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이 나타남.
 - SPS가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의 무역장벽으로 유의하게 기능
- ▶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은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와 규제 개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함.
 - 아세안의 TBT와 SPS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국가별·품목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 세터 설립을 추진
 -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 마련을 지원
 -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와 개별 회원국의 국가무역저 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무역기술장벽(TBT)과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는 생산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무역 확대에 장애가 되지 만, 팬데믹 이후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중요성 상승
 - 철폐보다는 아세안 역내에서 관련 규제의 조회를 통해 소비자 보호 조치 남발 축소 및 한-아세안 간 교역 확대에도 도움
 - 아세안 역내 회원국 간의 규제거리 및 한-아세안, 일-아세안 간 규제거리를 측정하여 지역경제 통합 정도를 평가
 - 한국과 아세안. 일본과 아세안 간 관련 규제의 유사성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아세 안 협력정책의 방향을 제시
 - 계량분석을 통해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가 수출국의 수출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2. 조사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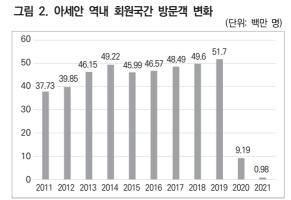
1) 아세안 경제통합 평가: TBT와 SPS를 중심으로

- 아세안은 2020년 자신들이 추진하는 공동체 달성을 위한 중간평가를 단행하고 2021년 「중간평가 결과 보고서(Mid-Term Review: ASEAN Economic Blueprint 2025)」를 제출
 - 보고서에 따르면 분야별 작업계획의 54.1%가 달성되었고 나머지 34.2%는 현재 추진 중이므로, 특별한 외생적 충격이 없다면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평가
-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아세안은 역내 통합의 중요성을 인식
 - 글로벌 경제는 공급망 재편, 인플레이션, 기후변화, 디지털 전환 등 과거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위기 요인들이 얽혀 있는 복합위기에 직면
 - 아세안포괄적회복프레임워크(ACRF) 추진, 2021년 '아세안경제공동체 달성을 위한 순환경제 프 레임워크(Framework for Circular Economy for the ASEAN Economic Community)'를 채택
 - 아세안 역내 시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경제통합을 추진하면서 아세안 역내 무역과 투자. 회원 국간 방문객 수가 2021년과 2022년에 증가(그림 1, 그림 2 참고)

- 미·중 패권 경쟁과 코로나19 팬데믹에 의한 공급망 재편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려는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아세안 경제통합의 성과이기도 함.

그림 1. 아세안 역내 교역 비중 변화 · (단위: 십억 달러(좌), %(우)) 4.500 25 4.000 24 3,500 3,000 23 2,500 22 2,000 21 1,500 1,000 20 500 1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 아세안 역내교역(좌) ● 아세안 총교역(좌) - 아세안 역내교역 비중(우)

자료: ASEANStats, https://data.aseanstats.org/trade-annually (검색일: 2023. 7. 1).



자료: ASEANStats, https://data.aseanstats.org/; stattist, https://www.statista.com/statistics/645761/tourist-arrivals-in-asean-region-from-other-asean-countries/(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7. 1)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2) 유사성 분석을 통한 지역경제 통합 평가

- TBT, SPS 중심으로 아세안 역내 회원국간, 그리고 한국-아세안, 일본-아세안 간 규제의 유사성 정도를 분석
 - 한국의 취약 산업을 중심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규제거리를 산출함으로써 규제 유사성과 양국간 경제협력 관계를 고찰
 - Cadot *et al.*(2015)의 규제거리(RD)를 사용하여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일본의 규제 유사성을 측정
- 아세안 회원국간 규제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2015년과 2018년 사이에 아세안 회원국간 TBT와 SPS 규제거리가 멀어졌음을 확인(표 1 참고)
 - 소득이 증가한 아세안 회원국이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규제를 각자 활용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 규제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가 2018년까지만 허용되어 최근의 결과를 비교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시장 왜곡 정책과 비관세조치 제거 노력으로 규제거리가 가까워졌을 것으로 추측
 - 예를 들어 '비관세조치 비용-효과성 도구킷'을 통해 비효율적 규제 시행 전에 자율적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각국의 규제가 유사하게 수렴되었을 것으로 기대

표 1. 아세안 회원국간의 규제거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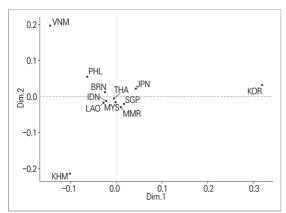
국가	SI	PS	Т	ВТ
4/1	2015	2018	2015	2018
브루나이	0.285	0.306	0.208	0.235
인도네시아	0.309	0.361	0.214	0.267
캄보디아	0.352	0.401	0.398	0.427
라오스	0.275	0.309	0.188	0.241
미얀마	0.306	0.333	0.195	0.236
말레이시아	0.288	0.306	0.229	0.250
필리핀	0.342	0.376	0.262	0.306
싱가포르	0.262	0.288	0.226	0.252
태국	0.332	0.350	0.205	0.231
베트남	0.446	0.392	0.314	0.441
평균	0.320	0.342	0.244	0.289

자료: UNCTAD NTM database(검색일: 2023. 5. 3)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 TBT와 SPS 규제거리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한국-아세안 간 규제거리는 일본-아세안 간 규제거리보다 먼 것을 확인(그림 3, 그림 4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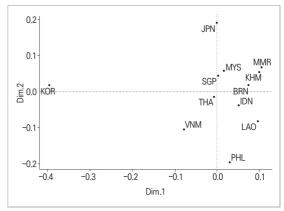
- SPS 규제거리의 경우 한국, 일본, 아세안 간 평균 규제거리 지수에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아세안 회원국과 규제거리가 가깝게 나타남.
- TBT의 경우 베트남, 캄보디아를 제외하면 일본-아세안 회원국 간 규제거리는 한국보다 더욱 가깝 게 위치해 있었고, 한국은 아세안 10개국과 상대적으로 규제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이 오래전부터 ERIA와 ADB를 통해 아세안의 제도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당연 한 결과로 이해
- 한국이 소비재 수출을 아세안 지역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회원국과 TBT, SPS 규제거리 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
 - 화경이나 디지털 등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분야에서 아세안의 제도적 연계성 개선 사업에 적극 적으로 참여할 필요
 -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한국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때, 한국과 아세안 각국의 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를 발전시켜 관련 데이터를 축적해야 함.

그림 3.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일본 간의 TBT 규제거리



- 주: 1) 아세안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NTM 자료를 활용함. 이에 아세안은 HS 2017, 한국과 일본은 HS 2012 기준으로 NTM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UN STATS에서 제공하는 HS코드 대응표를 이용하여 HS 2012 기준으로 통일함.
 - JPN(일본), MMR(미얀마), KHM(캄보디아), BRN(브루나아), MYS (밀레이시아), SGP(싱가포르), IDN(인도네시아), LAO(라오스), VNM(베트남), PHL(필리핀), THA(태국), KOR(한국)을 의미.
- 자료: UNCTAD NTM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3. 5. 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4. 아세안 회원국과 한국, 일본 간의 SPS 규제거리



- 주: 1) 아세안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NTM 자료를 활용함. 이에 아세안은 HS 2017, 한국과 일본은 HS 2012 기준으로 NTM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UN STATS에서 제공하는 HS코드 대응표를 이용하여 HS 2012 기준으로 통일함.
 - JPN(일본), MMR(미얀미), KHM(캄보디아), BRN(브루나아), MYS (말레이시아), SGP(싱가포르), IDN(인도네시아), LAO(라오스), VNM(베트남), PHL(필리핀), THA(태국), KOR(한국)을 의미.
- 자료: UNCTAD NTM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3. 5. 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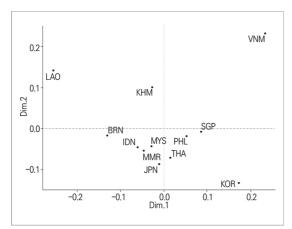
● 아세안의 SPS와 TBT에 취약한 한국 산업은 조제품,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 등으로 식별됨.

- 통상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계층화분석법(AHP)을 활용하여 아세안 지역의 TBT와 SPS 부과가 대아세안 수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식별
- SPS의 경우 생물보다는 조제품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TBT의 경우 일반차량, 철강, 보일러 기계류, 완구·운동용품 순

● TBT의 경우 가치사슬로 긴밀하게 연결된 산업의 규제거리는 짧게 나타났지만, 아세안의 보호 성향이 강한 SPS는 한-아세안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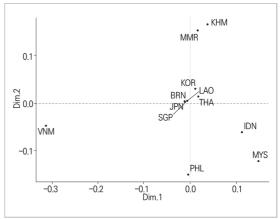
- 아세안의 TBT와 SPS에 취약한 산업을 2차원 평면에 나타낸 결과,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출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일수록 TBT 규제거리가 아세안 회원국과 일본에 가까움(그림 5, 그림 6 참고).
- 양 지역간 교역이 확대될수록 규제는 유사해지는 경향(일반차량, 철강: 교역을 통해 가치사슬로 연계될수록 규제 유사성이 상승해 지역통합의 가속을 시사)
- SPS로부터 영향받을 것으로 식별된 육·어류 조제품, 채소·과실 조제품은 한국과 다른 아세안 회원국 간 규제거리가 멀게 나타남(그림 7, 그림 8 참고).
 - 식품 부문은 지역간 제도적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한국과 아세안 지역 간 큰 소득 격차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이해

그림 5. 일반차량의 TBT 규제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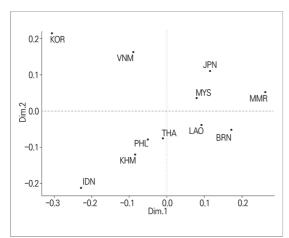
- 주: 1) 아세안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NTM 자료를 활용함. 이에 아세안은 HS 2017, 한국과 일본은 HS 2012 기준으로 NTM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UN STATS에서 제공하는 HS코드 대응표를 이용하여 HS 2012 기준으로 통일함.
 - JPN(일본), MMR(미안미), KHM(캄보디아), BRN(브루나아), MYS (말레이시아), SGP(싱가포르), IDN(인도네시아), LAO(라오스), VNM(베트남), PHL(필리핀), THA(태국), KOR(한국)을 의미.
- 자료: UNCTAD NTM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3. 5. 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6. 철강의 TBT 규제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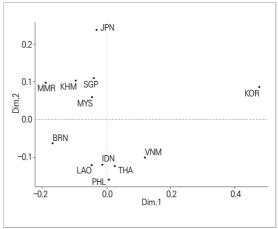
- 주: 1) 아세안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NTM 자료를 활용함. 이에 아세안은 HS 2017, 한국과 일본은 HS 2012 기준으로 NTM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UN STATS에서 제공하는 HS코드 대응표를 이용하여 HS 2012 기준으로 통일함.
 - JPN(일본), MMR(미인미), KHM(캄보디아), BRN(브루나아), MYS (말레이시아), SGP(싱가포르), IDN(인도네시아), LAO(라오스), VNM(베트남), PHL(필리핀), THA(태국), KOR(한국)을 의미.
- 자료: UNCTAD NTM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3. 5. 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7. 육·어류 조제품의 SPS 규제거리



- 주: 1) 아세안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NTM 자료를 활용함. 이에 아세안은 HS 2017, 한국과 일본은 HS 2012 기준으로 NTM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UN STATS에서 제공하는 HS코드 대응표를 이용하여 HS 2012 기준으로 통일함.
 - JPN(일본), MMR(미안마), KHM(캄보디아), BRN(브루나아), MYS (말레이시아), SGP(싱가포르), IDN(인도네시아), LAO(라오스), VNM(베트남), PHL(필리핀), THA(태국), KOR(한국)을 의미.
- 자료: UNCTAD NTM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3. 5. 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그림 8. 채소·과실 조제품의 SPS 규제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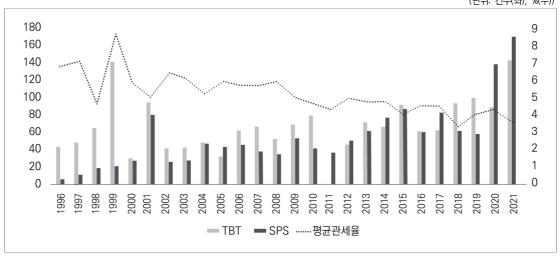
- 주: 1) 아세안은 2018년, 한국과 일본은 2016년 NTM 자료를 활용함. 이에 아세안은 HS 2017, 한국과 일본은 HS 2012 기준으로 NTM 자료가 수집되어 있어 UN STATS에서 제공하는 HS코드 대응표를 이용하여 HS 2012 기준으로 통일함.
 - JPN(일본), MMR(미안마), KHM(캄보디아), BRN(브루나아), MYS (말레이시아), SGP(싱가포르), IDN(인도네시아), LAO(라오스), VNM(베트남), PHL(필리핀), THA(태국), KOR(한국)을 의미.
- 자료: UNCTAD NTM 데이터베이스(검색일: 2023. 5. 3)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3) 아세안의 TBT/SPS 조치의 무역 효과 분석

- 아세안 역내 TBT와 SPS 현황을 살펴보고, 아세안의 TBT와 SPS가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고찰
- 아세안 비관세조치의 현황과 특징을 TBT/SPS 통보문과 특정무역현안(STC)* 통계치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의 네 가지 특징으로 요약
 - * 특정무역현안(STC: Specific Trade Concern)이란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가 사전통보 등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거나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회원국이 제기하는 무역현안
 - 최근까지 아세안의 관세율은 감소했지만, TBT/SPS 조치와 무역현안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그림 9 참고)
 - 아세안이 비관세조치 가운데 TBT와 SPS를 무역정책의 중심으로 활용하면서, 대아세안 수출을 확대 중인 한국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

그림 9. 연도별 아세안 TBT/SPS 통보문 건수와 평균 실효 관세율(1996~2021년)

(단위: 건수(좌),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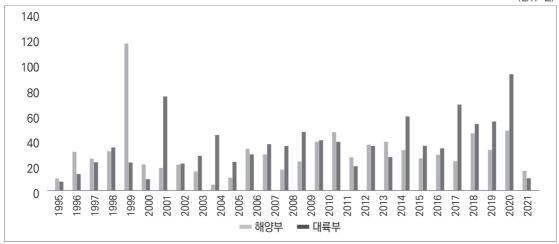


자료: TBT/SPS는 WTO I-TIP(https://i-tip.wto.org)를, 단순평균 실효 관세율은 World Bank WITS(https://wits.worldbank.org)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2. 1).

② 아세안의 대륙부는 TBT가, 해양부는 SPS가 더 많이 나타남(그림 10 참고).

그림 10. 연도별/국가 그룹별 아세안 TBT 통보문 건수 추이(1995~2022년)

(단위: 건)



자료: TBT/SPS는 WTO I-TIP(https://i-tip.wto.org)을, 단순평균 실효 관세율은 World Bank WITS(https://wits.worldbank.org)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모든 자료의 검색일: 2023. 2. 1).

- STC만을 고려할 때는 해양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음(표 2 참고).
 - 아세안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해양부 국가들이 기술적으로 더욱 발전된 조치를 도입했기 때문으로 이해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이미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
- 대륙부와 해양부 간의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격차에 따라 TBT와 SPS가 초래하는 경제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아세안의 TBT와 SPS에 대해 한국은 지역별, 국가별 특성에 따라 대응 방향을 유연하게 마련해야 함.

표 2. 아세안 국가별 SPS 통보문 누적 건수(1995~202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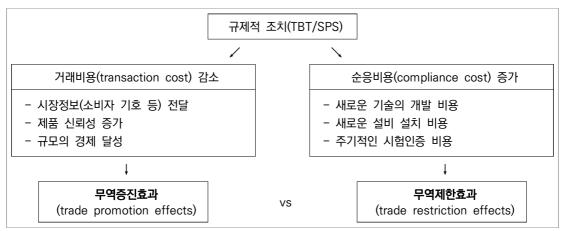
(단위: 건수)

건수	대륙부 국가	건수
512	태국	506
142	베트남	137
76	미얀마	8
53	라오스	3
3	캄보디아	0
786	합계	654
	512 142 76 53 3	512 태국 142 베트남 76 미얀마 53 라오스 3 캄보디아

주: WTO 가입 연도에 따라 캄보디아는 2004년, 베트남은 2007년, 라오스는 2013년 이후의 누적 건수를 집계. 자료: WTO I-TIP(https://i-tip.wto.org)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검색일: 2023. 2. 1).

- ❸ 아세안 비관세조치에 대해 대응 방향을 수립할 때 현재 우리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 필요
- 비관세조치에 대해 STC를 제기하는 국가들을 살펴보면 TBT는 주로 선진국이 주도하지만, SPS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 참여
- 수출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서 TBT/SPS가 야기하는 무역제한효과와 무역증진효과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
-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대륙부 국가는 최근 들어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선진국이 이미 도입했던 TBT와 SPS를 뒤늦게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
- [실증 분석] 1996~2021년 동안 아세안 10개 회원국의 TBT와 SPS가 213개 수출국들의 대아세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중력방정식을 기반으로 이원고정효과모형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

그림 11. 규제적 조치의 무역 효과 메커니즘



자료: 이순철 외(2022), p. 222.

- 중력모형을 기반으로 다음의 방정식을 고려

$$\begin{split} \ln EPT_{ijt} &= \beta_0 + \beta_1 \ln GDP_{it-1} + \beta_2 \ln GDP_{jt-1} + \beta_3 \ln TAR_{ijt-1} \\ &+ \beta_4 \ln NTM_{ijt-1} + \lambda_{ij} + \tau_t + \epsilon_{ijt-1} \end{split}$$
 [식 1]

여기서 i는 수출상대국(213개국), j는 아세안 회원국(10개국), t는 연도(1996~2021년)를 나타 냄. 'ln'은 해당 변수에 로그 변환을 했음을 의미

-i와 j 간 시간 불변적 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λ_{ij} 를, 특정 연도의 거시경제적 환경 요인을 제어하기 위하여 연도 더미인 τ_{i} 를 고려, ϵ_{iit} 는 오차항

- 모든 설명변수에는 역인과관계의 내생성 문제를 완화하고 시차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t-1년도 자료를 적용
- 무역정책 변수로서 TAR_{ijt-1} 는 i국에 대한 j국의 t-1년도 평균 관세 수준(단순평균 실효 관세율)을 나타냄.1) 관세가 높을수록 수출 비용이 증가하여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β_3 는 음(-)이 될 것으로 기대
- 핵심 변수인 NTM_{ijt-1} 는 i국에 대한 j국의 t-1년도 부문 비관세조치 수준(WTO TBT/SPS 통보문 건수의 합)을 나타냄(별도 분석에서 NTM을 TBT 통보 건수와 SPS 통보 건수로 각각 구분2)).
- 아세안 각국의 TBT/SPS 조치로 인해 대아세안 수출기업에 순응비용 증가와 거래비용 감소의 상 층 효과가 발생하므로 β_4 의 부호는 미리 단정할 수 없음.
- [결과 1] 아세안 비관세조치는 수출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전반적으로 유의하지 않음(표 3 참고).
- 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TBT로부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았고, 비OECD 국가의 대아세안 수출은 아세안 SPS로부터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받음 ⇒ 아세안 TBT가 선진국에 제기된다는 아세안 비관세조치 특징에 부합

표 3. 실증분석 결과: 전체 수출 및 OECD 회원국/비회원국 수출(1996~2021년)

변수	전체	수출	OECD 호	원국 수출	OECD 비	회원국 수출
간ㅜ	(1)	(2)	(3)	(4)	(5)	(6)
1 _m CDP	1.017***	1.017***	0.804***	0.804***	1.118***	1.118***
$ \ln GDP_{it-1} $	(0.161)	(0.161)	(0.260)	(0.260)	(0.189)	(0.189)
1 _n CDP	0.758***	0.754***	0.827**	0.813**	0.681**	0.682**
$ \ln GDP_{jt-1} $	(0.239)	(0.239)	(0.327)	(0.328)	(0.305)	(0.305)
$1_{\rm m} \left(1 \pm TAD\right)$	-0.084**	-0.083**	0.012	0.015	-0.086**	-0.085**
$\ln\left(1 + TAR_{ijt-1}\right)$	(0.033)	(0.033)	(0.063)	(0.063)	(0.035)	(0.035)
$ln(1+NTM_{it-1})$	-0.038		-0.063**		-0.026	
$III(1 + I\mathbf{V}IM_{it-1})$	(0.024)		(0.027)		(0.029)	
$\ln(1 + TBT_{it-1})$		-0.006		-0.040*		0.006
$III(1+IDI_{it-1})$		(0.020)		(0.023)		(0.024)
$\ln(1 + SPS_{it-1})$		-0.045**		-0.020		-0.049*
$III(1+SIS_{it-1})$		(0.022)		(0.019)		(0.026)
R^2	0.518	0.519	0.693	0.693	0.421	0.421
관측수	24,896	24,896	4,900	4,900	19,996	19,996
F 검증	29.76***	29.29***	22.46***	22.90***	22.30***	22.05***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²⁾ 괄호의 값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R^2 는 전반적(overall) 결정계수를 나타냄.

¹⁾ 특정 국가(i)에 대한 수입국(i)의 관세율이므로 FTA 등 무역협정으로 인한 양자간의 무역정책과 환경 변화까지도 반영되었다.

²⁾ TBT는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만 도입하므로 TBT_{jt-1} 로, SPS는 전체 국가뿐만 아니라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도 도입할 수 있으므로 SPS_{ijt-1} 로 표현할 수 있다.

- 2010년대 들어 아세안 TBT가 선진국의 대아세안 수출에 유의한 장벽이 된 것으로 나타남(부표 1 참고) ⇒ OECD 국가인 한국은 SPS보다는 TBT에 좀 더 중점을 두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
- ❷ [결과 2] 아세안 대륙부 국가들은 SPS가 유의한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남(표 4 참고).
- 대륙부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은 상대적으로 산업구조가 해양부에 비해 덜 고도화된 결과로 이해

표 4. 실증분석 결과: 아세안 역내 무역, 해양부/대륙부 수입(1996~2021년)

шл	아세안 역	내 무역	해양부	- 수입	대륙	부 수입
변수	(1)	(2)	(3)	(4)	(5)	(6)
1 _m CDP	0.746	0.747	1.111***	1.111***	0.697**	0.695**
$ \ln GDP_{it-1} $	(0.551)	(0.549)	(0.184)	(0.184)	(0.331)	(0.332)
In CDP	0.615	0.623	-0.052	-0.049	3.250***	3.298***
$ \ln GDP_{jt-1} $	(0.868)	(0.867)	(0.263)	(0.262)	(0.483)	(0.493)
$ln (1 + TAR_{iit-1})$	-0.173*	-0.166*	-0.081**	-0.081**	-0.053	-0.058
$III (1 + IAR_{ijt-1})$	(0.095)	(0.096)	(0.041)	(0.041)	(0.059)	(0.059)
$\frac{1}{\ln(1+NTM_{it-1})}$	-0.068		-0.023		-0.213***	
$m(1+i\mathbf{v} i m_{it-1})$	(0.071)		(0.029)		(0.046)	
$\frac{1}{\ln(1+TBT_{it-1})}$		-0.067		-0.008		-0.081
$III(1+IDI_{it-1})$		(0.054)		(0.023)		(0.054)
$ln(1+SPS_{it-1})$		-0.008		-0.041		-0.236***
$III(1+SFS_{it-1})$		(0.050)		(0.025)		(0.048)
R^2	0.572	0.574	0.420	0.420	0.322	0.318
관측수	1,606	1,606	16,824	16,824	8,072	8,072
F 검증	14.48***	14.40***	24.47***	23.85***	14.65***	16.49***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 2010년 대아세안 해양부 지역에서는 TBT가 유의한 무역장벽으로 기능
 - 한국이 아세안에 대해 STC를 한 건도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발달된 해양부가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TBT 조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적절한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
- 자국 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베트남 입장에서 높은 수준으로 TBT를 제기하기가 어렵다고 말한 베트남 현지 전문가 인터뷰와 결을 같이 함.
- ③ [결과 3] 아세안 역내 무역에 대해 아세안의 TBT와 SPS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2010년대 들어서면 통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부표 2 참고).
- 2010년대 중후반에 아세안 국가간의 TBT와 SPS 관련 무역현안이 등장했다는 기초통계와 일치
- 아세안 역내 회원국간 규제거리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멀어진 것과 일치하는 결과
- 아세안 경제통합 과정에서 규제조화와 표준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할 것임.

²⁾ 괄호의 값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R^2 는 전반적(overall) 결정계수를 나타냄.

3. 정책 제언

- [정책 대응 방향] 아세안의 규제와 제도가 일본과 유사하다는 점은 아세안 경제통합 심화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적극적으로 제도와 규제 개선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
 - 이를 통해 수출 증대뿐 아니라 국가의 위상 정립도 기대
 - 아세안 역내에서도 자체적으로 규제조화의 모습 출현
- 아세안의 TBT와 SPS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규제조화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필요
 - 현지 조사에서도 아세안 지역 담당 공무원의 TBT와 SPS 역량 확충이 필요함을 확인
 - 향후 한국의 대아세안 수출과 아세안의 대한국 수출도 고기술집약 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전망 ⇒ 선제적으로 관련 산업 부문에 한국의 제도를 이식하거나 관련 기술조치의 조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 ⇒ 양 지역가 규제거리를 축소
- ❷ 국가별·품목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대응을 위해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립을 추진
 - 해양부와 대륙부 아세안 지역 간 규제 차이가 존재, 대아세안 수출에도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
 - ⇒ 한국과 규제거리가 가장 가까운 싱가포르를 거점 삼아 아세안 역내 인증센터를 설치하고 아세안 역내 네트워크를 강화해나간다면 아세안의 기술조치 변화에 대한 유연한 대응 가능
 - 한-아세안 공동인증센터 설치는 우리 기업들의 요구사항이기도 함.
- ❸ 아세안 통합 표준 인증체계 설립을 제안
 - 아세안 10개국이 다양한 지리·경제·사회·문화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도전적인 제안이지만 안전 기준 요건이 보편적인 전기·전자 제품이나 규제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상품에 대해 시범적으로 시행해 보고 성과가 존재한다면 점진적으로 확대
 - 이를 위한 작업반을 설치하고 한국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규제조화를 유도
- ◆ 아세안무역저장소(ATR: ASEAN Trade Repository)와 개별 회원국의 국가무역저장소(NTR: National Trade Repository) 간 연계 강화를 지원할 필요
 - 무역저장소(TR: Trade Repository)는 무역과 관련한 관세 및 비관세조치에 대한 각국의 정보를 모아두는 일종의 정보 창고
 - 아세안 10개국은 소득격차가 크다 보니 국가무역저장소를 운영하는 역량에 국별 차이가 존재
 - 국별 저장소에 모인 정보가 다시 아세안 무역저장소로 이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별 저장소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역량을 키울 필요
 - 정보가 제대로 취합된다면 현재 아세안무역저장소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고, 관련 연구도 활발해 질 수 있음. **KIEP**

빠

부표 1. 실증분석 결과: 2000년대(1995~2009년)/2010년대(2010~21년), OECD 회원국/비회원국

		2000년대(1995~2009년))5~2009년)			2010년대(2010년대(2010~21년)	
Ý Ŧ	OECD 회원국 수출	원국 수출	OECD 비회원국 수출	차원국 수출	OECD 회원국 수출	원국 수출	OECD HI	OECD 비회원국 수출
긁	(1)	(2)	(3)	(4)	(2)	(9)	(2)	(8)
1s CDP	1.556***	1.554***	0.893***	0.892**	0.307	0.305	0.942***	0.944***
III $\sigma D F_{it-1}$	(0.467)	(0.465)	(0.353)	(0.351)	(0.444)	(0.445)	(0.265)	(0.265)
ממט	0.067	0.050	1.152*	1.195**	2.426***	2.412***	0.560	0.578
$\ln GDF_{jt} - 1$	(0.539)	(0.540)	(0.570)	(0.572)	(0.409)	(0.408)	(0.417)	(0.416)
1 (1 + 7.40	-0.023	-0.026	-0.013	-0.013	-0.013	-0.011	-0.162***	-0.164***
$\ln \left(1 + IAK_{ijt-1} \right)$	(0.088)	(0.088)	(0.045)	(0.045)	(0.075)	(0.075)	(0.043)	(0.043)
$1_{12}(1\pm MTM)$	-0.042		**060.0-		-0.110***		-0.049	
$\lim \langle 1 \rangle \langle 1 \rangle$	(0.034)		(0.038)		(0.035)		(0.034)	
$1_{22}(1 \pm TRT)$		-0.039		-0.032		-0.087***		-0.065*
$\Pi(1 \mid 1 D 1 i t - 1)$		(0.027)		(0.028)		(0:030)		(0.034)
1 (1 + CDC)		-0.004		-0.147***		-0.023		-0.023
$III(1 + OIO_{it-1})$		(0.038)		(0.046)		(0.022)		(0.027)
R^2	0.404	0.401	0.387	0.385	0.487	0.486	0.447	0.446
<u> </u>	1,761	1,761	7,916	7,916	3,139	3,139	12,080	12,080
규 쩐	24.61***	28.52***	15.27***	14.68***	11.29***	11.07***	8.35***	8.02***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의 값은 군집강간표준오차를, R^2 는 전반적(overall) 결정계수를 나타냄.

부표 2. 실증분석 결과: 2000년대(1995~2009년)/2010년대(2010~21년), 해양부와 대륙부

			2000년대(1995~2009년)	35~2009년)					2010년대(2	2010년대(2010~21년)		
Ϋ́ Ξ	아세안 역니	#대 무역	神の中	라	대륙부 수입	사	아세안 역내 무역	내 무역	해양부	사	計響	간
上	(1)	(2)	(3)	(4)	(5)	(9)	(7)	(8)	6)	(10)	(11)	(12)
$\ln GDP_{it-1}$	-0.965	-0.974 (0.671)	0.863**	0.858***	1.277**	1.280**	2.565** (1.230)	2.567** (1.230)	1.113***	1.112*** (0.311)	0.163 (0.357)	0.151 (0.357)
$\ln GDP_{ji-1}$	-0.885	-0.891 (0.912)	0.583 (0.475)	0.554 (0.479)	4.130*** (1.485)	8.628***	1.217	1.226 (1.102)	-0.266 (0.424)	-0.290 (0.422)	3.412***	3.345***
$\ln\left(1+TAR_{iji-1}\right)$	-0.213	-0.214 (0.287)	-0.031	-0.035	0.073 (0.091)	0.073 (0.091)	0.050	0.053	-0.193*** (0.056)	-0.196*** (0.056)	-0.091	-0.095* (0.056)
$\ln(1+NTM_{it-1})$	-0.102 (0.086)		-0.097*** (0.035)		1.234 (0.950)		-0.118* (0.062)		0.001		-0.207*** (0.047)	
$\ln{(1+TBT_{it-1})}$		-0.071 (0.045)		-0.055** (0.027)		1.276* (0.734)		-0.108		-0.072** (0.034)		-0.068
$\ln(1+SPS_{it-1})$		-0.078 (0.118)		-0.139*** (0.043)		-0.250 (0.454)		-0.029 (0.035)		0.017		-0.245***
R^2	0.506	0.506	0.493	0.491	0.311	0.213	0.577	0.579	0.375	0.359	0.154	0.150
라추수	642	642	7,476	7,476	2,201	2,201	964	964	9,348	9,348	5,871	5,871
저	80.6	8.13***	17.11***	16.63***	6.96***	7.49***	6.58***	6.22***	7.15***	7.02***	12.78***	16.59***

주: 1) *, **, ***는 각각 10%, 5%, 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나타냄. 2) 괄호 안의 값은 군집강건표준오차를, R^2 는 전반적(overall) 결정계수를 나타냄.